

제 311 회 임시회  
기획경제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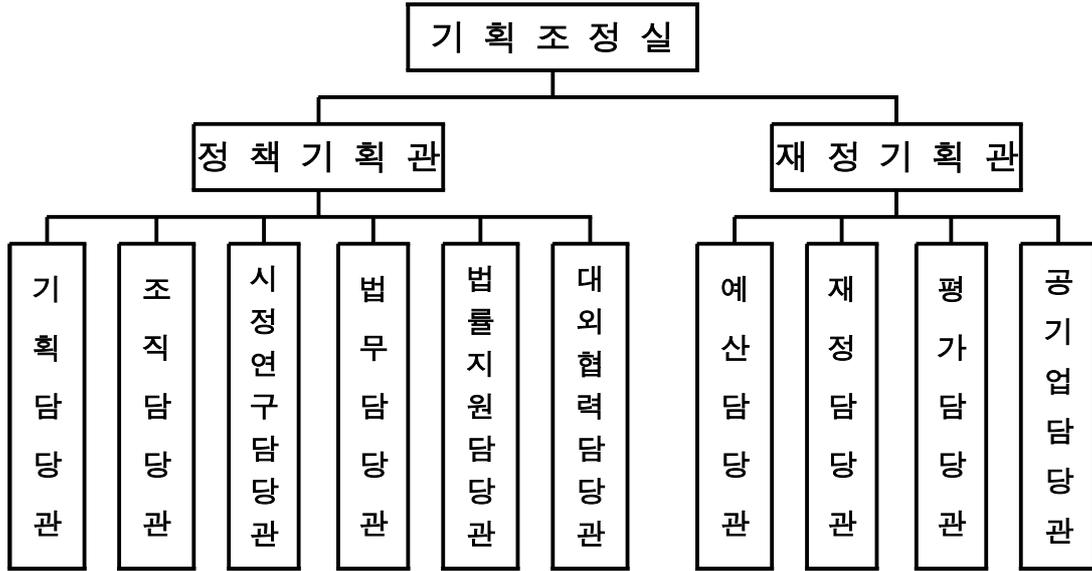
# 주요 업무보고

2022. 7.

기획조정실

# I. 일반 현황

**조 직** 1실, 2관, 10담당관, 45팀, 1직속기관 · 1출연기관



○ 직속기관 : 시립대학교(6처 8대학 10대학원)

○ 출연기관 : 서울연구원(1본부 8실 2센터)

**인 력** 272명/256명(정원/현원)

(’22. 6. 30.)

구 분	합 계	일반직	임기제	관리운영직
계	272 / 256 (149)	231 / 225	32 / 25	9 / 6
기 획 담 당 관	37 / 36 (15)	29 / 31	6 / 4	2 / 1
조 직 담 당 관	32 / 31 (19)	31 / 30	- / -	1 / 1
시 정 연 구 담 당 관	14 / 15 (10)	14 / 14	- / 1	- / -
법 무 담 당 관	26 / 22 (14)	22 / 20	3 / 1	1 / 1
법 률 지 원 담 당 관	30 / 27 (15)	12 / 10	18 / 16	- / 1
대 외 협 력 담 당 관	17 / 16 (8)	14 / 15	- / -	3 / 1
예 산 담 당 관	40 / 40 (23)	38 / 38	1 / 1	1 / 1
재 정 담 당 관	22 / 20 (13)	21 / 19	1 / 1	- / -
평 가 담 당 관	33 / 29 (18)	31 / 29	1 / -	1 / -
공 기 업 담 당 관	21 / 20 (14)	19 / 19	2 / 1	- / -

※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

## 주요기능

구 분	담 당 업 무
기 획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 업무계획 수립, 시정 현안사항 기획·조정</li> <li>○ 시의회 관련 업무, 국정감사 수감 총괄, 공약 총괄 관리</li> <li>○ 시정백서·현황 작성,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</li> </ul>
조 직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직 및 정원관리,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</li> <li>○ 사무이양·위임,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등</li> </ul>
시정연구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정연구, 직무발명, 도시경쟁력 평가 사항</li> <li>○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·지원 등</li> </ul>
법 무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, 납세자 보호업무</li> <li>○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</li> </ul>
법률지원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시 소송 수행, 법률자문, 계약서 및 위·수탁 협약서 심사</li> <li>○ 대시민 법률상담,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</li> </ul>
대외협력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-지역 상생발전 추진,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</li> <li>○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, 국회·지자체 등 협력 관련 업무 등</li> </ul>
예 산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, 예산집행 관리 총괄</li> <li>○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</li> </ul>
재 정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市·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, 기금운용 총괄</li> <li>○ 재정투자심사, 지방보조금·국고보조금 총괄 등</li> </ul>
평 가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정 주요사업·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</li> <li>○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</li> <li>○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</li> </ul>
공 기 업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자·출연기관 설립·지원, 경영평가, 재정 모니터링</li> <li>○ 투자·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</li> </ul>

## 예산 총 규모 : 2조 6,603억원

### ○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6.30.)

구분	2021년 최종예산(사업수)	2022년 최종예산(사업수)	증감
합계	3,734,525 (47)	2,660,250 (47)	-1,074,275
일반회계	1,560,589 (38)	660,387 (38)	-900,202
특별회계	206,268 (-)	243,279 (-)	37,011
기금	1,967,668 (9)	1,756,584 (9)	-211,084

\* 2021회계연도 결산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에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 미반영 등으로 규모차이 발생

### ○ 일반회계 : 총 6,604억원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6.30.)

구분	2021년 최종예산(사업수)	2022년 최종예산(사업수)	증감
합계	1,560,589 (38)	660,387 (38)	-900,202
기획담당관	1,017 (2)	1,152 (2)	135
조직담당관	1,293 (3)	1,265 (3)	-28
시정연구담당관	101,586 (8)	128,064 (8)	26,478
법무담당관	1,050 (3)	697 (3)	-353
법률지원담당관	7,596 (2)	7,766 (2)	170
대외협력담당관	1,721 (3)	1,644 (3)	-77
예산담당관	357,017 (3)	298,621 (3)	-58,396
재정담당관	1,086,065 (6)	218,252 (6)	-867,813
평가담당관	2,206 (4)	2,131 (4)	-75
공기업담당관	1,038 (4)	795 (4)	-243

### ○ 특별회계 : 총 2,433억원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6.30.)

구분	2021년 최종예산(사업수)	2022년 최종예산(사업수)	증감
예산담당관	206,268 (-)	243,279 (-)	37,011

### ○ 기금 : 총 1조 7,566억원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6.30.)

구분	2021년 최종예산(사업수)	2022년 최종예산(사업수)	증감
합계	1,967,668 (9)	1,756,584 (9)	-211,084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	899,261 (-)	1,224,408 (-)	325,147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	1,062,791 (-)	526,887 (-)	-535,904
대외협력기금(국내계정)	5,616 (9)	5,289 (9)	-327

※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

## II. 정책 목표

시민의 삶을 회복하고, 도시경쟁력을 강화

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

① 안정적인 시정운영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

②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

③ 시정신뢰를 위한 민관위탁 운영·평가관리 및 대외협력 추진

④ 실효성 있는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# III.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

## 1. 안정적인 시정운영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

- ① 시정 주요 현안 기획·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
- ② 효율적 기구·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
- ③ 시정연구 총괄·관리 기능 강화
- ④ 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
- ⑤ 시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
- ⑥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

## 2.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

- ①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
- ② 법령·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
- ③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
- ④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

## 3. 시정신뢰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·평가관리 및 대인협력 추진

- ①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
-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체계적 대비
- ③ 균형성과관리(BSC) 기반 주요사업 성과관리
- ④ 정부·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

## 4. 실효성 있는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- ①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관리
- ②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
- ③ 주요 예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도모
- ④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

# 1. 안정적인 시정운영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

① 시정 주요 현안 기획·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

---

② 효율적 기구·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

---

③ 시정연구 총괄·관리 기능 강화

---

④ 시정 맞춤형 학습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

---

⑤ 시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

---

⑥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

---

# 1 시정 주요 현안 기획·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

시정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는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

## □ 추진방향

-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**중장기 시정운영 계획 및 공약 관리**
- **주요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·협력 지원**
- **현안발생 시 긴급회의 소집 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**

## □ 추진내용

-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**중장기 시정운영 계획 및 공약 실천 관리**
  - 「서울비전 2030」 등 중·장기 계획 및 「성과관리계획」 등 단년도 계획을 연동하여 시정 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운영계획 관리
  - 민선8기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공약 이행점검 등으로 대시민 공약 실천 지원
- **실·본부·국간 정책 조정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부서간 소통 및 협업 지원**
  - 정례·수시 회의체 등 운영으로 관련 부서간 소통 유도
  - 조직·예산인력 등 시정 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협업 지원
- **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**
  -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
  - 코로나19 등 부서간 협력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협조체계 구축 및 수행

## □ 향후계획

- 시정 주요 현안 발생 시 긴급 현안회의 등 : 연중 상시
-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확정 및 대시민 공개 : ~ '22.10월

## 2

# 효율적 기구·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

기준인건비, 기구정원규정(대통령령) 등 지자체의 제한적 조직운영 여건 속에서 효율적 조직관리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 실행을 뒷받침

### □ 추진방향

- 기구 설치 필요성, 기능 및 규모 등 분석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**시정 현안의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**
- 부서 간 기능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**조직의 효율성 극대화**
  - 유사기능 통폐합, 행정수요 감소·안정화된 분야는 축소·조정하여 수요확대 분야로 재배치

〈 서울시 기구정원 현황 (22.6.30. 기준) 〉

- 본 청 : 3부시장 6실 4본부 11국 14관·단 164과·담당관 / 4,870명
- 소속기관 : 3사업본부 33직속기관(25개 소방서 포함) 46사업소 / 13,673명
- 시 의 회 : 1차 1실 6담당관 11전문위원 / 393명
- 합 의 제 : 3위원회(감사위원회,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, 자치경찰위원회) / 207명

### □ 조직관리 기본 전제

- 지자체별 기구·정원 운영 기준인 **‘기준인건비’ 내 조직 운영**
  - 행안부에서 지자체별 행정수요 등을 검토하여 연도말 책정·통보
  -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·정원 운영 현황 시의회 제출(12월)
- 기구정원규정(대통령령)의 범위 내 **시의회 의결로 기구·정원 관리**
  - 3급이상 기구 설치·사무분장 변경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필요
  - 총정원, 기관별·직급별 정원 변경은 서울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필요

### □ 향후계획

- 조직 분석·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: 연중 상시
-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시행 : '22년 하반기

### 3

## 시정연구 총괄·관리 기능 강화

분산된 시정연구 기능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여  
미래 시정운영 전략 수립 및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함

### □ 추진방향

-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분산된 시정연구 기능 통합·효율화
- 연구기관간 유사·중복연구를 방지하고, 시의성·실효성 높은 연구수행

### □ 추진내용

- 서울연구원, 서울기술연구원 혁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
  - 기관간 유사·중복연구 해소, 융복합 연구 확대, 연구조직간 유연성 확보, 시정 단기 현안문제 대응 기능 강화 등
- 연구 진행과정에서 시-연구원간 소통협의 강화
  - 市 제안과제 비중 확대 및 시의성·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논의 강화
  - 연구진행 관련 실·본부·국장과 담당 연구원간 적극적인 소통·협의
- 연구기능이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연구성과와 연구비 지원규모 연계
  - 연구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 조정
- 미래지향적 시정의제 및 시정연구과제 발굴 강화
  - 미래 서울경쟁력 강화, 도시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수행

### □ 향후계획

- 투자출연기관 연구과제 효율화 방안 논의 회의 : '22. 7월 ~
- 시정 연구기능 통합운영 관리체계 마련 : '22. 8월 ~

## 4

# 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

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市 주요정책과 현안에 반영 가능한 실행력 있는 학술용역 추진

### □ 추진방향

- 시정에 반영 가능한 학술용역 심의를 위한 학술용역심의회 전문성 강화
- 학술용역의 유사·중복 방지와 공개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
-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연구 및 서울연구원 등 내부 연구역량 적극 활용

### □ 추진내용

-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: 심의회 개최 4회(심의안건 22건)
- 학술용역 운영개선을 통한 학술용역 관리 강화
  - 학술용역 공개 및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모니터 정례화(주 1회)
  - 사업계획서 사전 검증(총 22건 검증 결과, 표절률 10% 이하)
-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정책연구용역공개 조례 등 개정
  - 심의안건 제출시 유사·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의무 명문화
  -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 ‘지체없이’ 로 명문화
-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확대 및 서울연구원 등 내부 위탁연구 활성화
  -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과제 지원 확대 : 심의(연 1회 → 수시)
  - 서울연구원 등 위탁연구를 위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(SeTTA) 회의(연 2회)

### □ 향후계획

- 수시 및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: '22. 7월 ~
  -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및 위탁 학술용역 심의
- 학술용역 최종평가 및 모니터 결과 보고 : '22. 12월

## 5

# 시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

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·이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함

### □ 추진개요

- 추진근거 :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
- 추진방향 :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으로 경제·사회·환경 등 지속가능성 제고
- 추진내용
  -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·이행계획 수립(5년 단위)
  - 시정 주요 행정계획(30개) 대상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시행
  - 경제·사회·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·운영

### □ 추진경과

-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·이행계획('15~'19) 수립 : '15. 4월(기본), '17. 4월(이행)
-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·이행계획('20~'24) 수립 : '20. 12월(기본·이행)

### □ 추진실적

-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별회의 등 운영('21년, 10회)
-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(조례 규정 30개) 지속가능성 사전검토('21년, 6건)
- 지속가능발전 추진 희망 자치구 대상 행정·재정 지원 및 협력('21년, 8건)
- 제2차 계획 중간점검 및 토론회('22.4월) 결과 활용, 보고서 발간('22.6월)

### □ 향후계획

-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원 및 협력 : '22. 7월 ~ 12월
-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: '22. 8월 ~ '24. 8월
-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 : '22. 8월 ~ 12월

## 6

#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

미래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정영향을 예측·분석하고, 인구변화 대응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함

### □ 추진방향

- 인구 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**인구변화 대응 전략 도출**
- 시정 추진 과정에서의 **인구영향평가 및 정책 환류 체계 마련**

### □ 추진내용

-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**인구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**
  - 인구변화 요인 분석을 통한 市 인구변화 특성 및 미래 시정방향 도출
- **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**을 위한 ‘**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**’ 구성·운영
  - 전문가 발제·토론 통해 인구변화 대응 방향 및 전략 논의(월 1회)

#### 【인구변화대응 전문가TF 운영현황(총 4회 운영)】

- 1차 회의(21.12.13.) : 인구변화대응 TF 역할·운영 방향, **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**
- 2차 회의(22. 3.16.) : 인구변화대응 방향·범위, **인구·사회 정책 분야 전략과제 논의**
- 3차 회의(22. 4.21.) : **경제·노동 정책 분야** 대응 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
- 4차 회의(22. 5.20.) : **저출산 및 가족정책 분야** 대응 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

-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**인구영향평가 도입**
  - 인구영향평가 대상·절차·범위·평가지표 선정 등 제도화 방안 추진

### □ 향후계획

- 인구변화 대응 계획 수립 위한 실본부국 TF 구성·운영 : '22.7월 ~ 9월
- 인구변화 관련 시민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: '22. 9월 ~ 10월
-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(5개년) 마련 : '22. 하반기
-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: '22. 8월 ~ 12월

## 2.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

①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

② 법령·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

③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

④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

# 1

##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

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

### □ 행정심판위원회 개요

- 심판위원 : 정원 50명/현원 40명(외부 35명, 내부 5명)
- 회의운영 : 연 24회 개최(매월 2회)

행정심판 운영 실적 ('22.6.20. 기준, 단위 : 건)	접수건수	재결건수	인용	기각	각하
	420	373	59(16%)	226(61%)	88(23%)

### □ 추진내용

- **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를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**
  - 사건 진행상황 수시 점검 및 처리 지연 사유 파악으로 안건 신속 처리
  - ※ 평균 재결기간 : 105일('20) → 75일('21) → 79.8일('22.6.20. 기준)
- **고난도 사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한 주심배정 비율 확대**
  -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청구사건 증가로 주심배정 필요성 증대
  - ※ 최근 3년간 주심 배정 비율 : 36%('20) → 56%('21) → 61%('22.6.20. 기준)
- **사회·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추진**
  - 국선대리인 선정 기준 확대(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가능)와 홍보 실시
  - ※ 국선대리인(신청/선임) 현황 : 16건/4건(25%)('21) → 10건/9건(90%)('22.6.20. 기준)

### □ 향후계획

- 행정심판 사례전파 및 재결레집 제작 및 배포 : '22. 11월

## 2

# 법령·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

시민이 생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법령·제도상 불편사항을 발굴·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

### □ 추진방향

-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법령·제도 발굴 및 개선
- 발굴·개선 내용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통한 신속한 개선 추진

### □ 추진내용

- 주택, 복지 등 시정 전 분야의 법령·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
  - 실·분부국, 투자출연기관, 자치구와 함께 총 51건 발굴, 대정부·국회 등에 건의

#### '22년 상반기 주요 개선사례

- ◎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('22.1.) : 지구단위계획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(25명내 → 30명내)
- ◎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('22.2.) : 국공립으로 전환한 가정어린이집도 기존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특례 적용 범위 확대

- 다양한 건의 창구를 활용한 개선과제 수용률 제고
  - 국무·차관회의, 시도지사협의회, 국회 등을 통해 주요 안건 개선 노력
  - 국무조정실, 행정안전부와 협업 및 지속적 건의로 회신율·수용률 향상

### □ 향후계획

- 하반기 법령·제도 등 개선과제 발굴·건의 : '22. 9월, 12월
- 주요 이슈별 개선과제 집중 발굴·건의 : 연중 수시

### 3

##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

시정 핵심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 
리스크 발생에 대한 선제적 보완 및 효율적 시정운영 적극 지원

#### □ 추진방향

- 체계적·전문적인 소송수행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법률지원체계 구축
-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제적 법률 자문 및 계약 심사로 리스크 감소

#### □ 추진내용

-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 : '22년 총 1,105건 수행

구 분	수 행 건 수			판 결 확 정					진 행
	계	이 월	신 소	계	승 소	승소율(%)	패 소	기타	
2022. 6월	1,105	860	245	193	139	79.0	37	17	912
2021	1,273	699	574	413	292	75.5	95	26	860
2020	1,115	559	556	416	278	73.5	100	38	699

-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으로 적법성 제고

- 시정현안\*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정책 수립부터 법률자문 지원
  - \*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1.27.) : 전담 TF 설치로 신속한 법률대응체계 마련
- 추진실적('22. 6월 기준) : 총 400건(내부 189건, 외부 211건)
  - ※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적('22.6월 기준) : 총 40건(내부 25건, 외부 15건)

- 주요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강화

- 우리시가 체결하는 주요 계약 및 협약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·재무적 사전검토 수행
-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(체크리스트) 개정('21.3월) 및 분기별 배포

#### □ 향후계획

- 소송수행 지속추진 및 소송사무규칙 개정 : '22년 하반기
-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: 연중 상시

## 4

#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

현행 법률상담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·추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편의성 강화로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·권익향상 도모

### □ 추진방향

-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기조에 부합하는 대시민 법률서비스 정비
- 법률상담제도 인적 기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책 효과성 증진
- 개선과제의 적극 발굴·방안 도출로 제도 운용의 선순환 체계 확보

### □ 추진내용

- 법률상담서비스 상담방식 변경 및 유사 제도 간 통합 추진
  -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마을변호사·법무사 상담방식을 전화 상담에서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으로 변경('22.5.23.)
  - 마을변호사 제도와 유사한 시민법률 상담실 폐지('22.7.1.)로 서비스 중복문제 해소 및 운영 내실화 도모
- 공익변호사 풀(pool) 적정성 확보 및 마을변호사 활동 유공자 표창
  - 마을변호사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안정적 운영
  - 우수변호사에게 표창장 수여로 자긍심 고취를 통한 법률서비스 향상 기대
- 법률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만족도 조사 실시
  - 만족도 주요 조사 항목(상담 신청 과정·이용 편의성·상담 및 응대) 구성 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추진
  -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후 이를 운영방침에 반영

### □ 향후계획

- 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: '22. 7월 ~ 8월
-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: '22. 12월

### 3. 시정신뢰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 · 평가관리 및 대외협력 추진

①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

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체계적 대비

③ 균형성과관리(BSC) 기반 주요사업 성과관리

④ 정부 ·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

# 1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

민간위탁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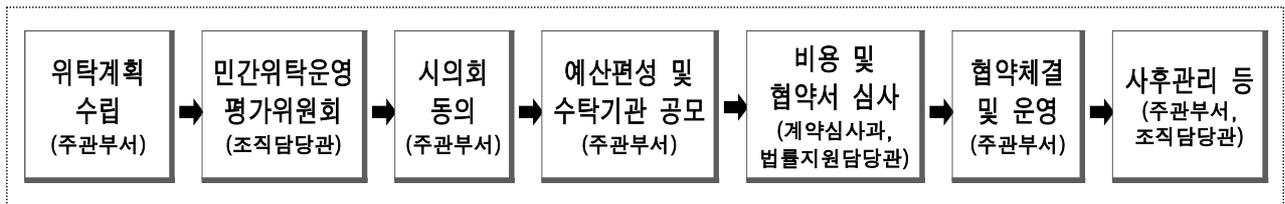
## □ 민간위탁 개요

### ○ 개념 및 근거

-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에 대해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등의 명목과 책임 하에 수행토록 하는 제도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·위탁),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 ○ 제도의 운영

-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및 위탁기간 3년 이내 원칙
  - ※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 조례에 따라 5년
- 민간위탁 신규(공모) 사무 추진 절차



### ○ 민간위탁 사업현황 : 총 419개 사업, 7,829억원

(단위 : 건, 억원, '22.5월 말 기준)

계		예산지원형*						자립형**	
		소 계		시 설		사 무			
건수	예산	건수	예산	건 수	예산	건수	예산	건수	예산
419	7,829	399	7,784	297	6,337	102	1,447	20	45
100.0%	100.0%	95.2%	99.4%	70.9%	80.9%	24.3%	18.5%	4.8%	0.6%

\* 예산지원형 : 민간위탁금 편성 지원으로 市の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무

\*\* 자립형 :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市の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사무

## □ 추진실적('22년)

- **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** : 상반기 총 4회, 46건(산규 8, 재계약\* 19, 재위탁\*\* 19)
  - 민간위탁 사무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심의

### <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요 >

- ▶ 구 성 :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15명(외부 12, 내부 3)으로 구성
- ▶ 운 영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
\* 재계약 :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여 위탁하는 것

\*\* 재위탁 : 위탁기간 만료 등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

- 제1·2차 민간위탁 **종합성과평가 추진** : 54개 사무('22.3~6월)
  - 평가대상 : 법령·조례상 별도 평가체계 없는 연 위탁금 5억이상 사무('22년 61개)
  - 시기/방식 : 위탁 만료일 90일전(위탁기간 내 1회) / 전문 평가기관 평가
  - 결과활용 : 위탁사무 업무개선, 재계약 적정성 심의 시 반영(75점 미만 재계약 배제)
- 관행적 민간위탁 추진 방지를 위한 **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강화**
  - 민간위탁 타당성 심층 검토, 법령·편성지침 위반 등 민간위탁금 예산심의 강화
  - 민간위탁 사무의 분야별 비중\*을 반영한 심의위원 재구성으로 심의 전문성 제고
    - \* 위탁사무 비중 : 복지 20.3%, 여성가족 13.8%, 청소년 13.4%, 경제 11.9%, 문화 6.7% 순
- 민간위탁 기관 **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·시행**
  - 채용 단계별 업무 매뉴얼 제정,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('22년 7월)
  - 채용 분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의무교육 지정으로 상시 학습체계 마련('22년 10월~)

## □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: '22. 7월, 9월
- 제3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(7개 사무) : '22.10월

## 2

##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체계적 대비

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국 공통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서울시 위상 제고

### □ 추진방향

-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한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시정 성과 가시화

### □ 추진내용 : '23년('22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 대비

- 평가근거 :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21조 (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)
- 평가대상 : 17개 시·도 ※ 특별·광역시(市部)와 도(道部)로 구분하여 평가
- 평가지표 : 6대 국정 목표를 아우르는 108개 지표\* 및 국민평가단 평가
  - \*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기조에 맞춰 지표 조정 예정(~'22.8월)
- 평가방법 :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광역지자체 평가
  - (정량평가) 시도별 부여된 지표의 목표치의 달성 여부 평가
  - (정성평가) 평가전문가 포함된 합동평가단에서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
  - (국민평가) 국민평가단이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 선정 ※ '21년도 신규 도입

#### ※ '22년('21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

- ▶ 정량평가 : 80개 지표 목표 달성률 75% ※ 전년 대비 4.2%p 상승
- ▶ 정성지표 : 21개 지표 중 2개 지표 우수사례 선정 ※ 전년도 6개 선정
- ▶ 국민평가 : 전국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로 우리시 2개 선정
- ※ '22년 행안부 재정인센티브 규모 : 8.52억원 ('22. 7월 특별교부세 교부 예정)

### □ 향후계획

- '23년('22년 실적) 평가 대비 정성지표 우수사례 컨설팅 : '22.9월~
- '23년('22년 실적) 평가 대비 정량지표 실적 집중관리 : '22.11월~

### 3

## 균형성과관리(BSC) 기반 주요사업 성과관리

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달성, 대내외 협력 노력도 등을 정량·정성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및 개인평가에 반영하여 시정 책임성 제고

### □ 균형성과관리(BSC) 개요

- 평가대상 : 3급 이상 기관 및 4급 이상 부서
- 수립·평가 : 연 1회(상반기) 지표 수립 및 반기별 평가
- 평가내용 : 핵심사업 지표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
  - (정량) 지표의 적정성,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및 목표 달성도 평가
  - (정성) 사업의 중요도, 난이도, 추진역량(업무개선, 노력도) 등 평가
- 결과활용 : 기관별 성과평가 및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에 반영

### □ 기관별 성과평가 - 성과포상금 차등 지급

- 평가대상 : 48개 기관(실·본부·국, 직속기관, 3급 이상 사업소 등)
- 평가주기 : 연 2회(반기별)
- 평가분야 : BSC 성과관리(70%), 대내외협력성과(20%), 평가자 점수(10%)
- 등급배분 : S등급(30%), A등급(50%), B등급(20%)

### □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 - 성과연봉 결정에 반영

- 평가대상 : 4급(상당) 이상 공무원
- 평가주기 : 연 1회(평가자 : 1 ~ 3급 - 시장 / 4급 - 소관 부서장)
- 평가분야 : BSC 성과관리(80%), 조직관리(5%), 평가자 점수(15%)
- 등급배분 : S등급(20%), A등급(30%), B등급(40%), C등급(10%)

### □ 향후계획

- '22년도 상·하반기 균형성과관리(BSC) 평가 : '22. 7월 / '23. 1월
- '22년도 상·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: '22. 8 ~ 9월 / '23. 2 ~ 3월
- '22년도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 : '23. 3월

## 4

# 정부·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

새 정부 및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정부,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

### □ 추진방향

- 정부·지자체 및 주요 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, 시정성과 극대화
-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서울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우호교류협약 추진

### □ 추진내용

-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 역할 강화를 위해 **정부-지방간 소통 협력체계 구축**
  - 지방분권 관련 공통 관심과제(자치조직권 확대, 자치경찰제도 개선, 소방공무원 국비지원 등)에 대한 의견 개진(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, 1. 13.)
  -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 요청(제20대 대통령 당선인-시·도지사 간담회, 4. 6.)
- 우리시 주도로 **시·도간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**
  -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비 80% 부담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(3.17.)
  -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 개선 필요과제 발굴 및 시도지사협의회 건의(총 14건)
-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**재해구호 지원으로 상생 가치 실현**
  -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울진, 삼척 등 지역 피해복구 긴급 지원(4억원)

### □ 향후계획

-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역 공통현안 해결 노력 : 연중 상시
  - 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역 현안을 의제화하고,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
-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추진 : 연중 상시
  - 신규 MOU 수요 및 권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을 통해 교류 협력사업 확대
- 법령·제도 개선을 위해 시의성 있는 안건 발굴 및 공동 대응 : 연중 상시

## 4. 실효성 있는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- ①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관리
- ②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
- ③ 주요 예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도모
- ④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

# 1

##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관리

시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투자사업의 소요 자원 적기 조달을 위해 재정 건전성 관리 하에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추진

### □ 발행개요

- 발행대상 : 도시철도망 구축, 공공주택 확충,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
- 발행규모 : 총 26개 사업 **총 2조 726억원**(신규 1조 9,089억, 이월 1,637억)
  - ※ 재난관리기금 자원 조성 2,000억원, 도시철도 매출공채 3,687억원 기 발행('22.6월말)
- 발행절차 : 온라인 전자입찰시스템 방식으로 발행공고 후 투자자 선정

### □ 발행계획

- (발행시기) **사업공정률, 채권금리 및 市 자금수급 등 고려 종합 결정**
  -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발행시기 및 규모 탄력적 조정
- (차 입 선) **발행금리, 상환전망 등 분석으로 유리한 조건의 차입선 선택**
  - 금리 변동성이 높은 시기로 전문가 수시 자문을 통해 차입선 적정 선정
  - ※ 채권 금리('22.7.8. 기준) : 모집공채 3.487%(1년물), 3.714%(3년물), 3.715%(5년물)
- (상환기간) **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물 위주로 변경**
  - 당초 1~5년 만기구조를 분산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1년물 발행으로 변경
  - ※ 감채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자원 최대한 활용하여 상환
  - 도시철도 매출공채는 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」에 따라 7년물 발행

### □ 향후계획

- 「2022년 하반기 지방채 발행 및 관리 실행계획」 수립 : '22. 7월
- 발행 시기별 발행공고 및 지방채 발행·세입처리 : '22. 7월 ~

## 2

##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

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하여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### □ 현황 및 필요성

- (비대화 우려) 지난 10년간 총9개(52.9%) 기관 및 정원 약 1만명 (50.9%) 증가로 비대화 우려

※ '11년 : 17개 기관, 정원 19,456명 / '22년 : 26개 기관, 정원 29,365명

- (정부 공공기관 혁신) 새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

### □ 추진방향

-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맞춰, 상반기 기관별 조직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 재구조화 실시
- 경영평가 지표 및 기관장 성과계약 개선을 통해 기관장 주도 자율적 경영 혁신체계 마련
- 기관의 경영혁신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지속적 수평 확산

### □ 추진내용

#### ① 자체 조직진단 기반, 조직 재구조화 추진

- 상반기 지도·감독부서 및 기관 합동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재구조화 실시
  - 기관별 환경분석, 기능조직분석 및 재설계, 인력분석 및 적정인력 산정

- 포스트 코로나, 제4차 산업혁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**시의성이 낮아진 조직·사무는 축소·폐지하고 시정역점사업\* 확대 추진**

\* 시정 역점사업 : 약자와의 동행,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 등

## ② **경영평가-출연기관장 성과계약 개선**

- 경영평가 **공통지표 간소화 및 사업지표 난이도 향상** 등 지표 개선
  - 공통지표 간소화 : 실효성 낮은 지표, 규모에 따른 유불리 지표 등 개선
  - 사업지표 난이도 향상 : 사업지표의 적정성·도전성 평가지표 신설 및 현안 사업 반영
- 출연기관장 **성과계약에 조직혁신 성과를 포함**, 기관장 주도하에 조직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
  - 기관장 사업성과지표를 ‘기관 현안해결 혁신성과’ 지표로 변경

## ③ **경영혁신사례 공유, 지속적 확산 유도**

- 각 기관별 혁신 사례 및 효율적 조직 재구조화 방안 등은 **경영 혁신 보고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기관의 자율적 확산을 유도**
  - 신년 업무보고('22.1월), 경영혁신 보고회('22.8월 예정)

## □ **향후계획**

- 기관별 재구조화 실시 : '22년 하반기~
- 경영혁신보고회 개최 : '22.8월
- 경영평가 편람안 및 성과계약 개선안 의견수렴 : '22.8월 ~ 9월
- '23년('22년 실적) 경영평가 방침 수립 : '22.12월
- '23년('23년 실적)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: '23.1월

### 3

## 주요 예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도모

주요 예산사업의 목표 달성도,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도모

### □ 추진방향

- 예산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평가제도 운영
- 평가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 객관적 평가로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

### □ 추진내용

#### ○ 재정사업평가('22.4월~10월)

- 근거 : 지방재정법 제5조(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)
- 사전심사 : '23년 신규 행사성 사업
  - ▶ 예비심사(예산담당관) → 민간위원회 심사·확정 → 예산반영
- 사후심사 : '21년 5억 이상 투자·경상사업, 행사성 사업, 성과부진사업 등 총 595개
  - ▶ 자체평가(사업부서) → 외부평가(한국행정연구원) → 예산반영

#### ○ 보조사업평가('22.4월~7월)

- 근거 :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(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)
- 대상 : 2021년 시비 보조사업 총 846개(통계목 기준)
- 주요내용 : 보조사업 연도별 성과평가 및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
  - ▶ 자체평가(사업부서) → 외부평가(한국행정연구원) 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(재정담당관)

#### ○ 시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업 성과분석('22.8월~9월)

- 근거 : 서울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(수시평가)
- 주요내용 : 사업성과, 사업간 유사·중복성, 市사무 적합성 등 검토

### □ 향후계획

- 평가결과 반영한 2023년도 예산 편성 : '22.10월

# 4

##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

확정된 예산·기금 등 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고,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

### □ 추진현황

- 대상 : 시설비, 연구용역비, 민간위탁금, 자치단체보조금 등 37개 통계목
- 목표(상반기) : 22조 7,207억 원(신속집행 관리대상액의 61.9%)

구분	예산현액	관리대상액	상반기 목표액
본청·자치구·공기업	84조 5,405억 원	36조 7,057억 원	22조 7,207억 원

\* 하반기 집행목표는 7월말 행정안전부 통보 예정

※ 상반기 추진실적('22.6.30.기준) : 목표대비 92.8%(21조 952억 원) 집행  
(단위 : 억원)

구분	예산현액	관리대상액	상반기 목표액	집행실적(목표대비)
계	84조 5,405	36조 7,057	22조 7,207	21조 952 (92.8%)
본청	47조 614	25조 5,300	16조 4,668	15조 2,747 (92.8%)
자치구	25조 3,460	6조 7,120	3조 7,319	3조 1,892 (85.5%)
공기업	12조 1,331	4조 4,637	2조 5,220	2조 6,313 (104.3%)

### □ 추진내용

- 집행관리 강화 및 주요 사업 중점 관리
  - 실·본부·국별 점검회의를 통해 부진사업 실적 관리 및 집행 체고 방안 강구
  - 대규모 투자사업(130개 사업 2조 5,702억 원)에 대한 주기적 집행현황 점검으로 사업 지연 및 반복적 이월 사례 방지
- 자치구 신속 재정지원 및 신속 집행 독려
  - 자치구의 확장적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보조금·교부금 신속 교부
    - ※ 자치단체보조금 62.2%(6조 9,511억원), 조정교부금 62.9%(2조 4,576억원) 교부 (6.30.기준)
  -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통한 자치구별 집행실적 공유 및 부진사업 집행 독려

### □ 향후계획

-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별 점검 : '22. 7월~
- 상반기 신속 집행 기관 성과평가 : '22. 7월중